

2021 기출문제집 추록 - 정치와 법

[경고] 이 자료는 2020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추록으로, 2020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에 추가된 주요 이론과 교체된 문제 및 해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 판매, 변형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민준호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I. 민주 정치와 헌법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에 의한 사회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 활동과 같이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 B는 권력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B는 이익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A는 B와 달리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의 권력 활동을 정치로 본다.

문제 해설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A는 국가 현상설입니다. 반면, 정치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B는 집단 현상설입니다.

- ① (X) 국가 형성 이전에도 공동체는 존재했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현상설(A)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② (X) 정치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 현상설(B)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도 정치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③ (X) 주민이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집단 현상설(B)입니다.
- ④ (X) 일반 사회 집단과 다른 국가만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 현상설(A)입니다.
- ⑤ (O)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는 국가입니다. 국가 현상설(A)은 정치를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보고, 집단 현상설(B)은 정치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 현상설(A)과 집단 현상설(B) 둘 다 국가의 권력 활동을 정치로 봅니다.

정답 ⑤

문제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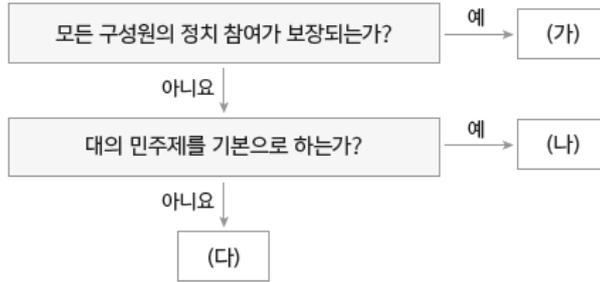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국가 현상설 vs 집단 현상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08

그림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형태이다.
-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이다.
-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문제 해설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가)는 현대 민주 정치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나)와 (다) 중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는 근대 민주 정치, 직접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입니다.

- ① (X)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O) 근대 민주 정치는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을 타파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 혁명은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을 사상적 배경으로 합니다. 계몽사상이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고, 사회 계약설이란 사람들이 천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이론입니다.
- ③ (X) 19세기 차티스트 운동을 통한 보통 선거의 도입 요구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보통 선거의 도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은 현대 민주 정치(가)의 특징일 뿐이며, 근대 민주 정치(나)의 특징은 아닙니다.
- ④ (X) 보통 선거의 도입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민주 정치(가)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인 성인 남자들만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했을 뿐이며, 여성의 정치 참여는 배제되었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27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국민 주권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 • 주권이란 국내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력이고(최고성), 국외에 대하여는 외세의 간섭 없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함(독립성)
-----------	---

22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p>ㄱ.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p> <p>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다.</p> <p>ㄷ.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p> <p>ㄹ.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p>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제 해설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3요소론이라고 합니다.

- ㄱ. (X) 주권이란 국가의 뜻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군주 주권론, 국가 주권론, 국민 주권론이 주장되었으나 현재는 국민 주권론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 전체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 집단이 주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 ㄴ. (X) 국민 주권론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아닙니다.
- ㄷ. (O) 주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대적 주권 이론으로 '군주 주권론'이 주장되었습니다. 특히 홉스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군주에게 이양하였으므로, 주권자인 군주는 무제한적으로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민 혁명에 의하여 절대 왕정이 붕괴됨으로써 '국민 주권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소에 의하면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서 국민이 소유하며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원리는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의 인권 선언을 비롯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명문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ㄹ. (O) 주권이란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고(최고성), 국외에 대하여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합니다(독립성).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민주 정치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13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문제 해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 내각제적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 ① (X) 국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는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② (O)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제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③ (O)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인정은 행정부 수반이 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④ (O) 국무총리제의 존재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 1차			
출제 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 의원 A는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한다.
- 정부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 ① ㉠의 발의자는 국회 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은 국회 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문제 해설

- ① (X) 법률안은 국회 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합니다. 국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② (O) 국회의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X)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이며, 국회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 이후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④ (X)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를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동안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모든 법안이 일괄 폐기됩니다. 즉, 법률안은 국회 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법률 제·개정 절차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29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 해설

- ① (X)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헌법 제49조). 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 ② (X)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가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때 호선이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위원 가운데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X)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57조).
- ④ (O)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국정 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정 조사는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국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84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에서 '행정부의 수반 및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사면' 사이에
다음 내용 추가

2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
→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37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
B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

- ①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 ③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 ④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문제 해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고,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A)'입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의 확인, 국가 및 공공 단체의 회계 감사권, 공무원 직무 감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감사원(B)'입니다.

- ① (X) 대통령(A)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 ② (O) 대통령(A)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됩니다(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70조).
- ③ (X) 권한 쟁의 심판이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헌법 재판소'가 담당합니다.
- ④ (X) 감사원(B)은 조직상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다만, 직무와 기능 면에서는 독립하여 활동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대통령, 감사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 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나.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다. 법원의 권한으로 재판에 관한 권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들 수 있다.
- 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마.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제 해설

- 가. (O) 헌법 제108조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 중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나. (O)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 상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 다. (O) 법원은 민사·형사·행정·선거·군사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또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가지며,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헌법 재판소’가 가지며,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집니다.
- 라. (X) 제시된 내용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의미하며,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제9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마. (O)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③

[개념플러스] 사법권의 독립
 형식적 의미로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입법부·행정부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로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 법원의 자율성,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문제 DATA

출제 연원	2019년 해양경찰 3차			
출제 영역	법원(종합)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4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은 □□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A에 (㉠)을 제청하였다.
-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을 신청한 후, 기각되자 A에 (㉢)을 청구하였다.

- ① A의 중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다.
- ④ ㉠은 위헌 법률 심판이고, ㉢은 권한 쟁의 심판이다.

문제 해설

- 법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A)」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인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A)」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헌법 재판소」, ㉠은 「위헌 법률 심판」, ㉡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입니다.
- ① (X)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② (X) 법원은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 ③ (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 ④ (X) ㉠은 ‘위헌 법률 심판’이고,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입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110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 '1 지방 자치의 의미와 형태'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		
종류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주), 도(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특별자치도(제주), 특별자치시(세종)
	기초 자치 단체	시, 군, 구(자치구)
구성	지방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대표 기관,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집행 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관 ■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 사무 감사·조사 ■ 임기 4년의 지방 의회 의원(지역구 + 비례 대표)
	지방 자치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기관 ■ 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정, 지방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 임기 4년(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기관 ■ 교육·학예 사무의 관리·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 광역 자치 단체에서만 선출, 선거 시 정당 공천 불가, 임기 4년(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60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
- ② 기초 의회는 비례 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
- ③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 ④ 교육 자치를 위해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문제 해설

- ① (O) 우리나라는 주민 참여 제도로 주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 폐지안을 지방 자치 단체장을 거쳐 지방 의회에 발의할 수 있습니다.
- ② (X)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지방 의회에는 광역 자치 단체의 의회인 광역 의회와 기초 자치 단체의 의회인 기초 의회가 있습니다. 광역 의회나 기초 의회 모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X)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은 지방 의회의 권한입니다.
- ④ (X) 교육감은 17개 시·도별 선출을 합니다. 즉, 교육감은 광역자치 단체에만 두고 있으며, 기초 자치 단체에 별도의 교육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Ⅲ. 정치 과정과 참여

0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③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 ④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문제 해설

(가)는 정책 결정 기구를 상대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인 ‘투입’입니다. (나)는 정부의 정책 생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산출’입니다.

- ① (X)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인 행정부의 결정과 행동이므로 산출(나)에 해당합니다.
- ② (X) 정당은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 언론, 학자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일 뿐이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같은 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산출(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O)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합니다. 투입(가)에서 정책 결정 기구를 상대로 요구한 정책이 산출(나)에 잘 반영되어 정책으로 생산될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 ④ (X) 향리형 정치 문화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상위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투입(가)과 산출(나)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전근대적인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입니다.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이스턴의 투입-산출 모형, 정치 문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130페이지 - '040 대표제 - 소수 대표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다음 내용을 날개에 추가

•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표제 중 소수 대표제의 개념 대신 상대(단순) 다수 대표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판례나 법률의 변경에 따른 변화는 아니고 학설 중 하나를 임의적으로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 대표제의 개념을 기억해두고, 소수 대표제를 상대(단순) 다수 대표제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도 한다는 정도로 정리한다.

☐ 144페이지 - 34번의 [개념플러스]에서 '국회 의원(지역구)' 아래 다음 내용 추가

기탁금 액수	선거	기탁금 액수
	비례 대표 국회 의원	500만 원

☐ 145페이지 - '042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아래 내용으로 교체

핵심 이론 정리	042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국회 의원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 : 25세 이상의 국민 • 1인 2표제 :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 1표씩 행사 • 의석수(21대 국회 기준) : 지역구 253석 + 비례 대표 47석(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 개정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비례 대표 국회 의원 의석 배분 시 지역구 국회 의원 당선인 수를 50% 고려)를 도입함 • 비례 대표 배분 최저 기준 : 정당 득표 3% 이상 or 지역구 의원 5명 이상 당선
대통령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 : 5년 이상 국내 거주 + 40세 이상의 국민 • 후보자가 1인일 때 :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 •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 당선
지방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일정한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 • 피선거권 :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 + 25세 이상의 국민 •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선거구제 채택

36

연령 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 해설

- ① (O) 민법은 제807조에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X)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 ③ (O) 민법은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4조의 경우 혼인 적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807조와 달리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에서의 모든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O) 공직선거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혼인 적령, 선거권과 피선거권, 성년과 미성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선생님 멘트

원본 문제의 제시문은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 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기에 37번의 제시문과 선택지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 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 의원 253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비례 대표 국회 의원 47석을 정당 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 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
- ②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 ③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 ④ 우리나라는 1인 2표제와 함께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의석 배분 시 지역구 국회 의원 당선인 수를 일정 비율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 해설

- ① (O) 정당은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후보를 각각 공천할 수 있을 뿐이며, 동일 인물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는 없습니다.
- ② (X)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전국 단위 비례 대표제’와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 비례 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전국 단위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③ (O)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단순 다수제’의 경우 지역구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1인만 당선이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 중 2인 이상을 선출하게 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하여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④ (O) 우리나라는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 이전에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별도의 정당 투표는 하지 않고,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헌법 재판소로부터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는 ‘1인 2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의석 배분 시 지역구 국회 의원 당선인 수를 일정 비율(50%)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15년 국가직(수정)			
출제 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 국회 의원 선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150페이지 - 43번 문제 ④번 선지와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 ④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 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 ④ (O) ‘보통 선거’란 ‘제한 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적, 연령, 거주지 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보통 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151페이지 - ‘043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선거권’을 다음 내용으로 교체

핵심 이론 정리		043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선거권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인정 범위 : 대통령 선거권·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권 인정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경과 +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 인정 범위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참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취득했기 때문에 지방 선거권(18세 이상), 주민 투표권(19세 이상), 주민 소환 투표권(19세 이상),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19세 이상)은 인정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는 기자 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B가 공천하지 말아야 할 낙천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A는 낙천 대상자들이 △△ 지역에 휴양 시설을 조성하려는 □□ 기업을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데 찬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 지역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C가 집회를 열어 휴양 시설 조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① 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한다.
- ③ C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 ④ B는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C는 A와 달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 해설

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한 B는 정당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C는 이익 집단입니다. 나머지 A는 시민 단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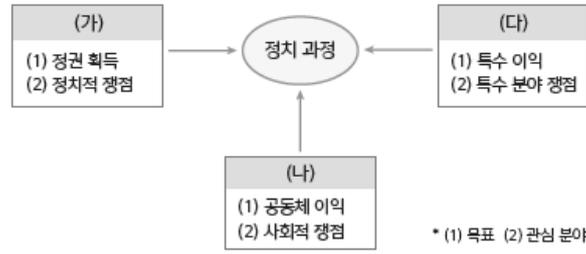
- ① (X)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B)입니다.
- ② (X) 정당(B)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등 가장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입니다. 다만, 이런 정치 활동의 궁극적 지향은 공익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워낙 사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치=사익실현」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새겨진 경우가 많은데,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 ③ (O) 이익 집단(C)의 이익 실현 활동이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④ (X) 대의제는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집단(C)은 시민 단체(A)와 마찬가지로 대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막아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 ⑤ (X) 시민 단체(A), 정당(B), 이익 집단(C)은 모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입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정당 vs 이익 집단 vs 시민 단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정치적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나)는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 ③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 ④ (가)와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 해설

(가)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 (나)는 공동체 이익을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 (다)는 특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 ① (O) 정당(가)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정치적 충원 기능). 또한 여론을 형성·조직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 ② (O) 시민 단체(나)는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 ③ (O) 이익 집단(다)은 구성원들이 집단의 특수한 목표와 이익을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 되도록 정치 과정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집단의 특수한 목표와 이익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 ④ (X)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스스로 내놓거나 국민에 의해 교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교체함으로써 정당(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 단체(나)와 이익 집단(다)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당(가)만의 특징입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정당 vs 이익 집단 vs 시민 단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IV. 개인 생활과 법

05

민법의 기본원리인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내용
(가)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나)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보 기>

- ㄱ. (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ㄴ. (나)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다)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ㄹ. (가)와 (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제 해설

- (가)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나)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 ㄱ. (X) 소유권 공공의 원칙(가)은 소유권 행사의 범위를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원칙일 뿐이지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ㄴ. (X) 사적 자치의 원칙(나)은 사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반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현대 민법의 원리 중 ‘계약 공정의 원칙’입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 ㄷ. (O)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무과실 책임의 원칙(다)’이 적용되는 예에 해당합니다.
- ㄹ. (O)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소유권 공공의 원칙(가)’은 무제한적인 소유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그 범위를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다)’은 환경 오염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원칙 모두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민법의 기본 원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166페이지 - ‘1 계약’에서 ‘의의’ 아래에 다음 내용 삽입

성립 요건	당사자의 권리 능력 존재, 청약(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과 승낙(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의 합치
-------	--

167페이지 - 06번의 '①번 해설'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조단에 다음 내용 추가

[개념플러스]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자이다. 자연인은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법에 따라 권리 능력이 인정된 회사 등을 말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출생으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2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만 42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하던 을(만 33세)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그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이 크게 다쳤다.
- 병(만 27세)은 정(만 51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배달 사원이다. 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을 하던 중 무(만 22세)는 병의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에서 4주간 치료를 받았다.

- ① 갑은 특수 불법 행위, 을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 ③ 병이 사고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④ 병의 무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무는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해설

- ① (X)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서 과실 책임). 그러나 점유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공작물 소유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작물 소유자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공작물 소유자, 을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을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을이 면책될 경우 갑은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② (O)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점유자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공작물 점유자인 을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③ (X) 일반 불법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병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무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병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이 사고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X) 병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즉, 피용자(종업원)인 병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이므로 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할 경우 사용자인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는 정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은 피용자인 병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소방직			
출제 영역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이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은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을에게 ㉠ 협의상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갑은 가정법원에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문제 해설

- ① (X)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X)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느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 배우자)인 ‘을’도 상대방 배우자인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구별됩니다.
- ③ (O) 협의상 이혼(㉠)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송을 통해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그 내용은 다르지만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④ (X)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가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이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민법」 상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1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가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공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③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문제 해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 ① (O)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要式性)이라고 합니다.
- ② (X)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말로써 전함)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받아 적고 읽음)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따라서 ‘증인 1인이 참여’한다는 것과 ‘유언자만 정확성을 승인’한다는 ②번 선택지의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O)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 단단히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음)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1항).
- ④ (O)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정답 ②

[개념플러스] 유언의 형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스스로 기록 + 날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 구술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구술 + 공증인 필기 낭독 + 유언자와 증인(2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비밀 증서 작성 + 증인(2인 이상)에게 제출 + 봉투에 날짜 기재 +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유언자가 그 중 1인에게 말로 유언 + 그 증인이 필기 낭독 + 다른 증인이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법원에 검인 신청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 1차			
출제 영역	유언의 형식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불치병으로 사망하였다. 갑의 유가족으로는 ㉠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을, 갑과 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만 18세)과 정(만 15세), 아버지 무가 있다. 갑이 남긴 재산은 7억 원이며 채무는 없다. 갑은 자신의 전 재산을 ○○ 단체에 기부한다는 ㉡ 유언을 남겼다.

<보 기>

ㄱ. 갑의 사망으로 병은 행위 능력이 생긴다.
 ㄴ. 갑과 을의 ㉠으로 인하여 을과 무 사이에 인척 관계가 형성되었다.
 ㄷ. ㉡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을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ㄹ. ㉡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병과 정의 법정 상속분 합계는 4억 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제 해설

- ㄱ. (X)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병은 만 18세로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했다고 하여 미성년자에게 행위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성년(만19세)이 되어야만 행위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ㄴ. (O) 법률혼이 성립하면 혼인 당사자 간에는 배우자로서 친족 관계가 발생하며, 배우자의 가족과는 인척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척이란 혼인으로 형성된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법률혼이 성립하면 갑의 배우자인 을과 갑의 직계 존속인 무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형성됩니다.
- ㄷ. (X) 유언자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상속인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 단체에 기부한다는 갑의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경우 을은 갑의 배우자로서 법적 상속분의 $\frac{1}{2}$ 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ㄹ. (O) 유언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경우 유언의 내용과 상관없이 갑의 재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1순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을과 직계비속 병과 정이 갑의 재산 7억 원을 1.5 : 1 : 1(=3 : 2 : 2)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을은 3억 원(=7억 원 x $\frac{3}{7}$), 병과 정은 각 2억 원(=7억 원 x $\frac{2}{7}$)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 병과 정의 법정 상속분의 합계는 4억 원(=2억 원 + 2억 원)이 맞습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소방직			
출제 영역	혼인의 효과, 유류분, 상속분 계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211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에서 '임대차 기간 보장'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사이에 다음 내용 삽입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or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단, 기간은 2년) (2020.12.10. 시행 개정법 기준 [■])
계약갱신 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2020.12.10. 시행 개정법 기준[■])까지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단,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임차인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 청구 가능(법정 손해 배상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은 5% 초과 불가

■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 12. 10. 시행 전까지 적용되는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과 관련한 통보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하여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은 2020. 12. 9.까지 적용된다.

❏ 213페이지 - 56번 문제의 ④번 '해설'과 '개념플러스'를 다음과 같이 수정

- ④ (O)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2020. 12. 10.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개념플러스]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 ①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2020. 12. 10.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③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A는 B 소유의 X 주택을 2017년 4월 11일 B에게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A는 원래 2017년 5월 11일 중도금 1억 6천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었는데, 2017년 4월 21일 A는 B에게 지급한 계약금 4천만 원을 포기하고 X 주택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 갑은 B 소유의 X 주택을 2018년 2월 13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B와 체결하였다. 갑은 2018년 3월 15일 X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은 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2019년 9월 3일 병이 적법한 저당권 실행으로 X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X 주택은 2019년 10월 24일 정에게 6억 원에 매각되었다.

다음은 병의 경매 신청 당시 X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일부이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7년 9월 7일 제0000호	2017년 9월 6일 설정 계약	채권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B(이하 생략) 저당권자 을(이하 생략)
2	저당권 설정	2018년 7월 5일 제0000호	2018년 7월 4일 설정 계약	채권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B(이하 생략) 저당권자 병(이하 생략)

- ① 계약금을 받은 B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
- ② A가 만일 중도금을 지급했다라도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 ③ 갑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 ④ 갑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을, 병 모두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 ⑤ 을이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을은 X 주택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문제 해설

- ① (X) 매도인(B)도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 ② (X)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③ (X)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다음날(3월 16일)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①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X) 등기부에서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날은 2017년 9월 7일로 갑이 확정일자를 받은 2018년 3월 15일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반면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날은 2018년 7월 5일로 갑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늦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보다는 후순위로, 병보다는 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⑤ (O) 경매가 시작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와 상관없이 저당권 설정 등기 시기,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변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권리를 표시한 을이 제일 먼저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액이 2억 원이고, 매각 대금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답 ⑤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부동산 매매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V. 사회생활과 법

2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갑은 기소되었다. 그 이후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석방되었고,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 1심 법원은 갑에게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① 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을 위해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③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 ④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문제 해설

- ① (X)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합니다. 이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법관'입니다.
- ② (X) 구속 적부 심사란 수사 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 제도와 구별됩니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공소 제기)된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석방(㉡)되었습니다. 즉, 갑은 '피고인'이므로 갑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갑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것입니다.
- ③ (O) 제시된 사례에서 1심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심만 대상으로 하며, 합의부 관할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집행 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유죄 판결입니다. 형법은 집행 유예의 효과와 관련하여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5조). 즉, 집행 유예 판결에서 정한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며,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유예 판결에서 정한 기간인 2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뿐입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형사 절차의 의미와 과정, 국민 참여 재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37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갑	을	병	정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보 기>

ㄱ. 갑과 정은 모두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ㄴ.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ㄷ.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 사건 수사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제 해설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제2조). 또한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는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을 말합니다.

- 갑 : 10세 이상~19세 미만은 아니지만 14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갑은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 을 : 10세 이상~19세 미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14세 이상도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을은 10세 미만입니다.
 - 병 : 10세 이상~19세 미만이지만, 14세 이상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병은 10세 이상~14세 미만입니다. 또한 상점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측범소년에 해당합니다.
 - 정 : 10세 이상~19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14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은 14세 이상~19세 미만입니다. 또한 상점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 ㄱ. (X) 검사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갑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ㄴ. (O) 정은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을(10세 미만)과 병(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연령이 높지만, 갑(19세 이상)보다는 낮습니다.
- ㄷ. (O) 형사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을(10세 미만)과 병(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 ㄹ. (O) 범죄소년은 형사 법원에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 법원(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252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에서 '휴일'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이에 다음 내용 삽입

연차 유급 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	---

40

갑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만 18세인 갑은 친권자인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이 사장인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되었다. 사장인 을은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될 경우 유급 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갑은 3개월간 쉬는 날 없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 동안 학업을 병행하느라 월급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인 병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임금이 병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 ①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 ④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 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문제 해설

- ① (X)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하여 근로 시간이나 휴일 및 야간 근로의 제한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만 18세라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따라서 갑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② (O)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 ③ (X) 근로기준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갑은 만 18세이므로 민사상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양부모가 갑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즉, 갑은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68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3조 제1항) 갑의 양부모가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④ (X)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제1항).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는 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일에 몇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소자(15세 이상~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1일에 연장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제69조).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4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갑과 을은 각각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보 기 >
- ㄱ. 갑, 을 모두 지방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ㄴ. 을은 B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A 회사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ㄹ. A 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제 해설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 노동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반면,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 회사의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ㄱ. (O)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갑과 을 모두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사용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ㄴ. (X)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B 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 소송의 경우에도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며, A 회사 사용자가 피고인 것도 아닙니다.
- ㄷ. (O)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ㄹ. (X)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만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역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갑의 해고에 대해서는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을의 해고에 대해서는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264페이지 - 51번 문제의 '보기'와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18세의 A는 모든 영역에서 성인자로 취급된다.
- ㄴ. (X) 미성년자라도 만 18세에 달한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한 혼인을 하게 되면 사법상 성인자로 보게 되는데, 이를 '성년 의제'라고 합니다. 다만, 공법 기타 사법 이외의 영역(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03

표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O : 예, X : 아니요)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가?	O	X	X	O	O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보다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가?	X	O	X	O	O
국제 사회에서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중시하는가?	O	X	O	O	X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가?	X	O	O	X	X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O	X	O	X	O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문제 해설

- 첫 번째 질문 :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자유주의(이상주의)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 두 번째 질문 :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보다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자유주의(이상주의)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 세 번째 질문 : 국제 사회에서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중시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 네 번째 질문 :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의(이상주의)적 관점도 자국의 안보를 중시하긴 하나 그 방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 안보를 선호합니다.
- 다섯 번째 질문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세력 균형 전략을 말합니다.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 결론 : 제시된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아야 하고, 나머지 질문인 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병'뿐입니다. 병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맞게 일관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07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 ② 국제 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③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 ④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문제 해설

- ① (O) 교황이 주도하던 중세 봉건 체제가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으로 붕괴되고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 ② (X)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도로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맹’이 탄생했습니다(1920년). 그러나 미국의 불참, 일본·독일·이탈리아의 탈퇴, 소련의 배제로 인해 강대국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군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연맹에 미국의 참여가 있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O) 트루먼 독트린(1947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터키에 군사·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선언을 말합니다.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 ④ (O) 몰타 회담(1989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1990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전 지구적 분쟁이 줄어든 반면, 인종·종교·민족 문제 등으로 인한 국지적 분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12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 (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 (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 의정서

-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해설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조약입니다.

- ① (X)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은 ‘조약(다)’입니다. ‘국제 관습법(가)’은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 법규입니다.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이 없습니다.
- ② (O) ‘법의 일반 원칙(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원래 문명국의 국내법 체계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법 원칙이지만,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막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③ (X)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은 ‘국제 관습법(가)’입니다.
- ④ (X)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다)’의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어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의미하는 ‘국제 관습법(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나)’은 원래 문명국의 국내법 체계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법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2021 기출문제집 추록 - 경제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2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는 커피숍 개업을 위해 1,000만 원을 들여 커피숍 사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였다. 시장 조사에 따른 연간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 연간 예상 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단위 : 만 원)					
구분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대출 이자	기타 경비
금액	10,000	5,000	3,000	1,000	1,000

- ① 커피숍 개업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0원이다.
- ② 커피숍 개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억 원이다.
- ③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매물 비용에 해당한다.
- ④ 커피숍 개업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4,000만 원이다.

문제 해설

직장인 A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4,000만 원은 직장인 A가 커피숍 개업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인건비(1억 원) + 재료비(5,000만 원) + 임차료(3,000만 원) + 대출 이자(1,000만 원) + 기타 경비(1,000만 원) = 2억 원은 명시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2억 원과 암묵적 비용 4,000만 원을 합친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 ① (X) 이윤은 연간 예상 수입(2억 5,000만 원)에서 기회비용(2억 4,000만 원)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커피숍 개업에 따른 경제적 이윤은 1,000만 원입니다.
- ② (O) 명시적 비용은 어떤 선택을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명시적 비용은 인건비(1억 원) + 재료비(5,000만 원) + 임차료(3,000만 원) + 대출이자(1,000만 원) + 기타 경비(1,000만 원) = 2억 원이 됩니다.
- ③ (O) 매물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사례에서 A는 시장 조사를 위해 이미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매물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 ④ (O)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합니다. A가 커피숍 개업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연봉 4,000만 원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4,000만 원은 커피숍 개업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 1차			
출제 영역	합리적 선택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41

<보기>는 경제 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보 기>		
질문	A	B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예	아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가?	㉠	㉡
(가)	아니요	예

- ①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 ②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 ③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 ④ (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문제 해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A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B는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 ① (X) 시장 경제 체제(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효율성」을 더 강조합니다. 「형평성」을 더 강조하는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B)입니다.
- ② (O) 경제적 유인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적으로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자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A)입니다.
- ③ (X)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A)입니다. 따라서 ㉠에는 ‘예’, ㉡에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합니다.
- ④ (X)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시장 가격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A)입니다. 따라서 (가)에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시장 경제 체제(A)는 ‘예’, 계획 경제 체제(B)는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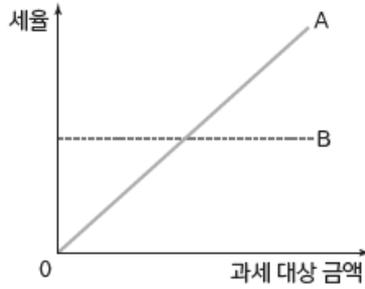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서울시(속기직 등)			
출제 영역	경제 체제의 유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63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 ②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문제 해설

과세 대상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A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B는 비례세 제도입니다.

- ① (X) 부가 가치세는 소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례세(B)가 적용됩니다.
- ② (X)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A)가 적용됩니다.
- ③ (X) 직접세는 주로 소득과 재산에 적용하는 조세 부과 방식입니다. 소득세와 재산세는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A)를 적용합니다.
- ④ (O)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A)가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B)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비례세(B)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누진세와 비례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이다. ㉠ ~ ㉤ 안에 문구가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구 분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가능 여부	(㉠)	(㉡)
부과대상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
조세 저항	(㉢)	(㉣)
비고	- 누진세는 주로 (㉣)에 적용되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 비례세는 주로 (㉢)에 적용되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 ① ㉠ 가능 ㉡ 불가능 ㉢ 약함 ㉣ 강함 ㉤ 간접세 ㉥ 직접세
- ② ㉠ 불가능 ㉡ 가능 ㉢ 강함 ㉣ 약함 ㉤ 직접세 ㉥ 간접세
- ③ ㉠ 가능 ㉡ 불가능 ㉢ 강함 ㉣ 약함 ㉤ 간접세 ㉥ 직접세
- ④ ㉠ 불가능 ㉡ 가능 ㉢ 약함 ㉣ 강함 ㉤ 직접세 ㉥ 간접세

문제 해설

-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해서 조세 전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은 ‘불가능’, ㉡은 ‘가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직접세는 담세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내 돈이 나가는구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세저항도 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담세자가 직접 납세를 하지 않으며, 소비 여부에 따라 담세 여부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따라서 ㉢에는 ‘강함’, ㉣에는 ‘약함’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직접세는 주로 소득과 재산에 적용되는 조세 부과 방식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개별적으로 크기를 측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세율을 높여가는 누진세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주로 소비에 적용되는 조세 부과 방식입니다. 소비의 경우 개별 소비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누진 적용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와 결합합니다. 따라서 ㉤은 ‘직접세’, ㉥은 ‘간접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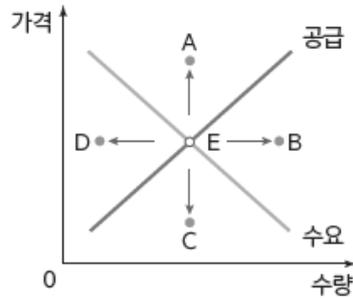
문제 DATA

출제 연원	2019년 해양경찰 3차			
출제 영역	직접세와 간접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II. 시장과 경제 활동

15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 해설

왼쪽에 보이는 [개념플러스] 보이시죠? 기본서에서는 「외워 두면 정말 편한 균형점의 이동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좀 품위 있게 하려면 '외워두면 도움 되는'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외워 두면 정말 편한'이라는 뭔가 감정을 담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정말 편한'이라는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암튼 보조단의 그림에서 정리한 것처럼 A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쪽으로 이뤄진 것이고, B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쪽으로 이뤄진 것이며, C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같은 쪽으로 이뤄진 것이고, D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쪽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 ① (X)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 ② (O)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 쪽이 같다면 E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③ (X)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E에서 C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 ④ (X)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균형점이 E에서 D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시장 균형의 변동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30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 ②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한 비율만큼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 ③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어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하하면 수요량이 적게 늘어나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문제 해설

- ①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E_d=1$)일 때 소비자는 정액 구매를 합니다. 정액 구매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액수만큼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의 판매수입은 일정하게 됩니다.
- ② (X)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E_d=0$)일 때 「가격 변화율=판매수입 변화율」의 공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한 비율만큼 기업의 판매 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③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E_d>1$)인 경우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은 가격을 인상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 ④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0<E_d<1$)인 경우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해도 수요량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1차			
출제 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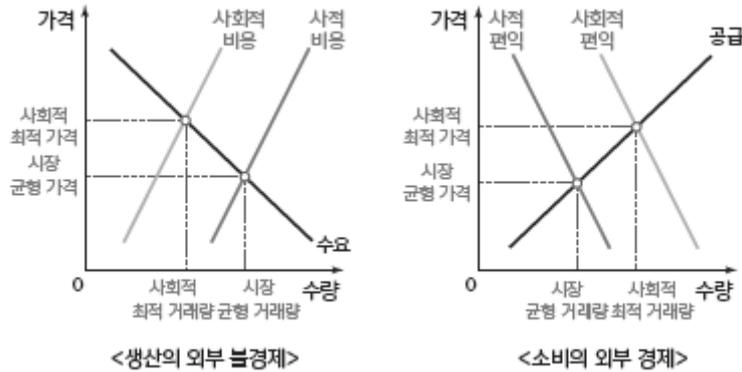
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

구분	생산 측면의 (가)	소비 측면의 (나)
영향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개선책	(㉤)	(㉥)

- ①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 ② ㉠과 ㉡ 모두 '작다'이다.
- ③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
- ④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문제 해설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은 것은 생산의 외부 불경제입니다.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은 경우는 소비의 외부 경제입니다.



- ① (X) (가)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 (나)는 소비의 외부 경제입니다.
- ② (X) 생산의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큼니다. 소비의 외부 경제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큼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크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 ③ (O) 외부 불경제는 많아서 문제(과잉 생산 및 소비)인 경우이고, 외부 경제는 적어서 문제(과소 생산 및 소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④ (X)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의 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을 감소시켜야 하고, 소비의 외부 경제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소비의 외부 경제와 생산의 외부 불경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X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이다. 표는 ○○시에서 X재가 1개씩 늘어날 때마다 주민 갑~병이 각각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을 나타내며, X재 설치 비용은 1개당 15만 원이다. ○○시는 주민들이 얻는 총 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X재의 설치량을 결정한다. 단, ○○시의 주민은 갑, 을, 병으로만 구성되며, 설치 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은 없다.

(단위 : 만 원)

구분	갑	을	병
첫 번째 X재	19	12	16
두 번째 X재	14	8	11
세 번째 X재	8	7	9
네 번째 X재	4	6	7
다섯 번째 X재	2	3	5

- ① X재의 설치량은 3개가 될 것이다.
- ② X재가 설치됨에 따라 세 사람 중 을이 가장 큰 편익을 얻는다.
- ③ X재 설치 비용을 세 사람에게 1/3씩 부담하게 한다면, 갑이 얻을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 ④ 갑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여 X재 설치 비용을 을과 병에게만 1/2씩 부담하게 한다면, X재로 인한 총편익은 76만 원이다.
- ⑤ X재 설치 비용이 1개당 18만 원이라면, 15만 원일 때보다 X재 총 설치 비용은 6만 원 적을 것이다.

문제 해설

① (X)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네 번째 X재를 설치할 때 '총편익-총비용'의 값이 61만 원으로 가장 크므로 X재의 설치량은 4개가 될 것입니다.

구분	총편익	총비용	총편익-총비용
첫 번째 X재	47(=19+12+16)	15	32
두 번째 X재	80(=47+14+8+11)	30	50
세 번째 X재	104(=80+8+7+9)	45	59
네 번째 X재	121(=104+4+6+7)	60	61
다섯 번째 X재	131(=121+2+3+5)	7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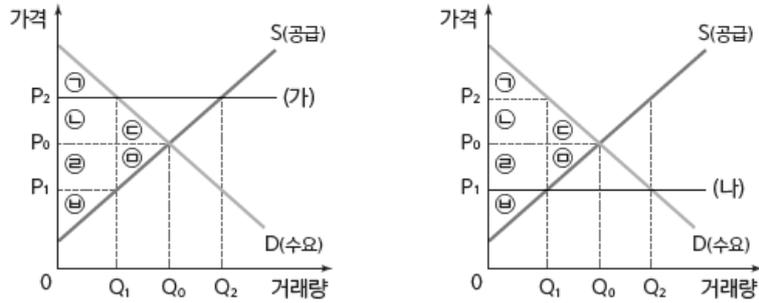
- ② (X) 네 번째 X재를 설치함으로써 갑이 얻는 편익의 총합은 45(=19+14+8+4)만 원이고, 을이 얻는 편익의 총합은 33(=12+8+7+6)만 원, 병이 얻는 편익의 총합은 43(=16+11+9+7)만 원입니다. 따라서 갑이 가장 큰 편익을 얻게 됩니다.
- ③ (X) 네 번째 X재까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총비용은 60만 원(=15만 원×4개)입니다. 이것을 세 사람이 1/3씩 나눠 부담하면 한 사람당 2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순편익=편익-비용'인데 ②번 해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번째 X재까지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갑(45만 원), 을(33만 원), 병(43만 원)으로, 모두 20만 원은 넘기 때문에 이들의 순편익은 모두 양(+)의 값이 나옵니다.
- ④ (X) 갑이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고 해서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편익은 그대로 갑, 을, 병이 누리는 편익의 총합인 121만 원이 됩니다.
- ⑤ (O) X재 설치 비용이 18만 원이라면 세 번째 설치했을 때 총비용은 54만 원(=18만 원×3개)이 되므로 '총편익-총비용'은 50만 원(=104만 원-54만 원)이고, 네 번째 설치했을 때 총비용은 72만 원(=18만 원×4개)이 되므로 '총편익-총비용'은 49만 원(=121만 원-72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설치했을 때 '총편익-총비용'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설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 설치비용은 60만 원(=15만 원×4개)에서 54만 원(=18만 원×3개)으로 6만 원 감소합니다.

정답 ⑤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응용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 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를 시행하면 $Q_1 \sim Q_2$ 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 ②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 +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 ③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 + ㉡이 감소한다.
- ④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문제 해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규제를 실시하는 것(가)은 최저 가격제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규제를 실시하는 것(나)은 최고 가격제입니다.

- ① (X) 최저 가격제(가)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잉여가 ㉠+㉡만큼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 ② (X)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 중에서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뀌고, ㉣은 소실됩니다.
- ③ (O) (가)와 (나) 둘 다 가격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Q_1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Q_1 의 우측에 있는 ㉢, ㉣의 잉여는 소실됩니다.
- ④ (X) 최저 가격제(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에서 ㉠으로 감소하고, 최고 가격제(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에서 ㉢으로 감소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의 이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4

표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 하나이다)

구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실질 GDP
A만 증가	상승	㉠
B만 감소	상승	㉡
(가)	하락	증가

- ① A는 총공급, B는 총수요이다.
- ② ㉠과 ㉡은 모두 '증가'이다.
- ③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다.

문제 해설

- ① (X) 총공급의 변화 없이 총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물가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A는 총수요입니다. 총수요의 변화 없이 총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물가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B는 총공급입니다.
- ② (X) 총공급의 변화 없이 총수요만 증가하면 실질 GDP는 증가하고, 총수요의 변화 없이 총공급만 감소하면 실질 GDP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은 증가, ㉡은 감소입니다.
- ③ (O) 총수요(A)의 변화 없이 총공급(B)만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④ (X) 총수요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국민 경제 균형의 변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43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 ㄴ.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 수지가 악화된다.
- ㄷ.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 ㄹ.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불리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제 해설

- ㄱ. (X)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화폐를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변제해야 할 채무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ㄴ. (O)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합니다. 국내 물가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국산보다 값싼 수입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경상 수지는 악화됩니다.
- ㄷ. (O)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지급받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를 실질 소득의 감소라고 합니다.
- ㄹ. (X) 물가 상승은 곧 실물 자산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유리해집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인플레이션의 영향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51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②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③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 ④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며,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

문제 해설

- ① (X)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게 자금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 은행은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 ② (O)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고, 통화량 증가는 곧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는 저축 대신 소비를 할 것이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증가합니다.
- ③ (O) 세율을 인하하면 개인 소득이나 기업의 판매 수입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 수익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가계는 소비를 늘릴 것이고,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④ (O)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국공채를 매입하면 그 현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통화량 증가는 곧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1차			
출제 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79

그림은 갑국의 연도별 고용 지표 관련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의 변화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2017년	25%	70%	5%
2018년	20%	70%	10%

<보 기>

- ㄱ.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 ㄴ. 고용률은 하락하였다.
-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였다.
- ㄹ. 실업자 수 증가율이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율보다 작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해설

ㄱ. (O) 실업률($=\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경

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2017년 실업률은 $6.67\% (= \frac{5}{75} \times 100\%)$ 이고,

2018년 실업률은 $12.5\% (= \frac{10}{80} \times 100\%)$ 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상승하였습니다.

ㄴ. (X) 고용률($=\frac{\text{취업자수}}{\text{노동가능인구}} \times 100\%$)은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노동 가능 인

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노동 가능 인구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과 2018년 노동 가능 인구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도 70%로 동일하므로 취업자 수 역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과 2018년의 노동 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의 변화가 없으므로 고용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ㄷ. (O) 경제 활동 참가율($=\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노동가능인구}} \times 100\%$)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화가 없었고,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서 80%로 증가했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한 것입니다.

ㄹ. (X) 실업자는 5%에서 10%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즉, 실업자 수 증가율은 $100\% (= \frac{5}{5} \times 100\%)$ 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25%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즉,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율은 $20\% (= \frac{5}{25} \times 100\%)$ 입니다. 따라서 실업자 수 증가율(100%)이 비경제 활동 인구 감소율(20%)보다 큼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고용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IV. 세계 시장과 교역

05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A국은 현재 X재와 Y재를 5단위씩 생산하고 있다. B국의 경우 X재는 A국과 동일하게, Y재는 5단위 더 생산하고 있다. B국이 Y재만을 생산한다면 최대 20단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반면, A국은 Y재만을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이 B국의 1/2에 불과하다.

- ① A국의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단위이다.
- ②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③ B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단위이다.
- ④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의 2배이다.

문제 해설

「A국은 현재 X재와 Y재를 5단위씩 생산하고 있다. B국의 경우 X재는 A국과 동일하게, Y재는 5단위 더 생산하고 있다.」를 바탕으로 현재 A국과 B국이 각각 생산하고 있는 X재와 Y재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X재	Y재
A국	5단위	5단위
B국	5단위	10단위

이 상황에서 B국이 Y재만을 생산한다는 것은 X재 5개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Y재 10개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국의 경우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 생산입니다.

구분	X재	Y재
B국	5단위→0단위(-5X)	10단위→20단위(+10Y)

A국이 Y재만을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이 B국의 1/2이라는 것은 A국이 Y재 1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X재 5개 생산을 포기하면 Y재 5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A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1개 생산입니다.

구분	X재	Y재
A국	5단위→0단위(-5X)	5단위→10단위(+5Y)

국가별 X,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X재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Y재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A국	1Y	1X
B국	2Y	1/2X

- ① (X) 위 표에서 보듯이 A국의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단위입니다.
- ② (O) 위 표에서 보듯이 A국은 B국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X재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B국은 A국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Y재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 ③ (X) B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단위입니다.
- ④ (X) A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단위 생산이고, B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단위 생산입니다. 따라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A국의 1/2배입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소방직
출제 영역 무역이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 ② 외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해외여행이나 외국으로의 유학이 감소한다.
- ③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국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 ④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입으로 지출하는 외화에 비해 많아져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문제 해설

- ① (O) 환율이 상승할수록 외채 상환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빌려서 1,100원으로 환전해서 기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했는데, 값으려고 보니 1달러당 1,300원으로 올라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1달러를 매입하기 위해 1,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 ② (O) 환율이 1달러 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1달러짜리 외국 여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도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을 상승시켜 수요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 ③ (X)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1달러짜리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산품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 ④ (O)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해서 수출이 증가합니다. 반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수입으로 지출하는 외화에 비해 많아져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 1차			
출제 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V. 경제생활과 금융

0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100만 원을 예금 상품 A 또는 B에 투자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이자 수입을 나타낸다. 단, A, B의 이자 지급 방식은 각각 단리와 복리 중 하나이며, 예치 기간 동안 연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원)

예치 기간 \ 예금 상품	1년	2년	3년
A	110,000	220,000	㉠
B	100,000	210,000	㉡

<보 기>

- ㄱ. A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 ㄴ. 연 이자율은 B가 A보다 높다.
- ㄷ. ㉡이 ㉠보다 크다.
- ㄹ. 예치 기간 중 물가 상승률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A, B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해설

A상품은 매년 11만 원씩 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11%의 단리 이자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B상품은 1년차에 10만 원의 이자가, 2년차에 11만 원(=21만 원-1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100만 원에 대해 10%의 복리 이자를 적용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B는 10%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ㄱ. (O) A는 단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단리 이자는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ㄴ. (X) A는 11%, B는 10%로 연 이자율은 B가 A보다 낮습니다.
- ㄷ. (O) ㉠은 22만 원에서 11만 원이 더해진 33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은 21만 원에서 12.1만 원(=21만 원 $\times \frac{10}{100}$)이 더해진 33.1만 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다 큼니다.
- ㄹ. (X)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면 명목 이자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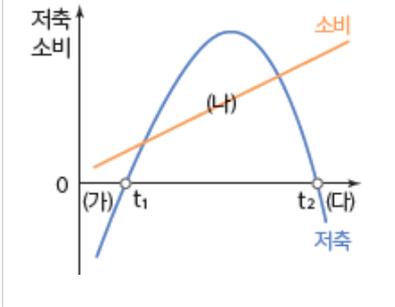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단리법과 복리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351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의 우측 날개에 다음 내용 삽입

• 생애 주기에 따른 저축과 소비

저축과 소비가 주어진 경우에는 저축 곡선이 가로축과 교차하는 지점이 각각 취업 시점과 은퇴 시점이 된다. 또한 저축 곡선이 가로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이 음(-)의 저축, 저축 곡선이 가로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양(+)
의 저축이 나타나는 구간이 된다.



2021 기출문제집 추록 - 사회·문화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01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봄 발생한 ○○지역 산불의 한 원인으로 양간지풍(襄杆之風)이 지목되고 있다. 이 바람은 ㉠ 남고북저의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국지적 강풍이다.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의 밤을 지새운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인명 피해 없이 ㉡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있다.
- ④ ㉠과 같은 현상과 ㉡과 같은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탐구가 가능하다.

문제 해설

- ㉠은 자연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 ① (X)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 ② (X)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는 존재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확실성의 원리는 인과 관계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 현상(㉠)의 특징입니다.
 - ③ (X)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이 나타나는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합니다. 두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에서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④ (O) ‘경험적 자료’란 오감을 통해 직접 체험하여 획득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탐구가 가능합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소방직			
출제 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23

자료 수집 방법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	특징
(가)	-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얻는 데 용이함 - 통계 처리가 용이하며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함
(나)	-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 -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할 때 유용함 -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음

- ①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 ②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③ (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문제 해설

(가)는 질문지법, (나)는 면접법, (다)는 참여 관찰법에 해당합니다.

- ① (O) 질문지법(가)은 수치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양적(실증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 ② (X) 면접법(나)은 표본 선정이 어렵고 한 명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③ (X) 참여 관찰법(다)은 사회 현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실험법입니다.
- ④ (X) 질문지법(가)은 양적(실증적) 연구, 면접법(나)과 참여 관찰법(다)은 질적(해석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자료 수집 방법 -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24

자료 수집 방법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중 하나이다)

비교 항목	비교 결과
자료 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	A < C
조사 대상자들의 상호 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	B, C < A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	A, C < B

※ 낮음 또는 작음 < 높음 또는 큼

- ① A는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 ②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③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 ④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문제 해설

조사 대상자들의 상호 작용 파악이 용이한 A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사 대상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가 용이한 B는 문헌 연구법입니다. 질문지법이나 참여 관찰법은 사람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망해도 문헌은 남습니다. 따라서 문헌 연구법은 수 백, 수 천 년 전의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A가 참여 관찰법이고, B가 문헌 연구법이므로 나머지 C는 질문지법입니다.

- ① (X) 참여 관찰법(A)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조사 대상자간의 의사소통을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입니다.
- ② (O) 문헌 연구법(B)은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향되게 해석하는 등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X) 질문지법(C)은 다수의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문항별, 선지별 응답률의 수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정보를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지법(C)은 질적 자료보다 양적 자료 수집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 ④ (X) 질문지법(C)은 조사 대상자가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방식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문맹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참여 관찰법(A)은 문자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맹자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자료 수집 방법 -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D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연구 사례	자료 수집 방법
갑은 소방관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하여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하고,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소방관들과 심층 면담을 하여 그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조사하였다.	A, C
을은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질문 내용을 구성하고, 30개의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 소방관 500명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B, C
병은 소방관 안전 실태 연구를 위해 6개월간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겪는 위험 상황을 관찰하고, 정서적 교감이 형성된 소방관 15명과 깊은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A, D

- ① C는 A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다.
- ② D는 B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 ③ A, D는 B에 비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④ C는 B, D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⑤ C, D는 A, B와 달리 질적 연구에만 사용 가능하다.

문제 해설

첫 번째 사례에서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한 것은 문헌 연구법입니다. 또한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것은 면접법입니다. 따라서 A, C는 각각 문헌 연구법과 면접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것은 문헌 연구법입니다. 또한 30개의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따라서 B, C는 각각 문헌 연구법과 질문지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에서 공통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법입니다. 따라서 C는 문헌 연구법입니다. C가 문헌 연구법이면 A는 면접법이 되고, B는 질문지법이 됩니다. 나머지 하나인 D는 참여 관찰법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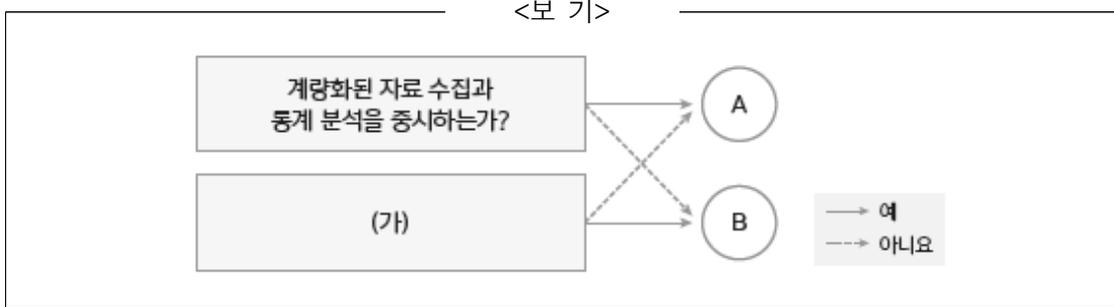
- ① (X) 문헌 연구법(C)은 면접법(A)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 ② (X) 참여 관찰법(D)은 질문지법(B)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지법(B)은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수치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가 용이합니다.
- ③ (O) 면접법(A)과 참여 관찰법(D)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질문지법(B)은 객관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④ (X) 문헌 연구법(C)은 기존 문헌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지법(B)은 문자를 통한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요하고, 참여 관찰법(D)은 대화를 통한 언어적 상호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⑤ (X) 문헌 연구법(C)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B)은 양적 연구, 면접법(A)과 참여 관찰법(D)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자료 수집 방법 - 문헌 연구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 ④ (가)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문제 해설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따라서 A는 실증적 연구 방법, B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 ①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B)입니다.
- ② (X)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A)입니다.
- ③ (O) 실증적 연구 방법(A)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이 같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해석적 연구 방법(B)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 ④ (X) '경험적 관찰'은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A)과 해석적 연구 방법(B)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즉, 두 연구 방법 모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서울시(속기직 등)
출제 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 vs 해석적 연구 방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변수 간의 인과 관계 분석
- (나) 자기 주도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
- (다) 자기 주도 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 도출
- (라) ○○시 △△고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마) 학업 성취도는 1학기과 2학기의 지필 평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기로 결정

- ① (가) 단계와 (다)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 ②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 ③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 ④ 연구는 (나)→(라)→(가)→(마)→(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 해설

(가)는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나)는 문제 제기, (다)는 가설 설정, (라)는 자료 수집, (마)는 연구 설계에 해당합니다.

- ① (X)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단계(가)와 달리 가설 설정 단계(다)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됩니다.
- ②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시문에 나온 연구 과정에서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실증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사회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와 (다) 둘 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필요로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 ③ (O) 문제 제기 단계(나)와 연구 설계 단계(마)는 둘 다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입니다.
- ④ (X) 연구는 문제 제기(나)→가설 설정(다)→연구 설계(마)→자료 수집(라)→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가)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실증적 탐구 과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II. 개인과 사회 구조

03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개인은 사회적 환경 속의 다른 대상자들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해 간다. 또한 개인이 자아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또래 집단 등이 중요하다.

을 :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배우고, 게임의 규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도와 역할을 배우게 된다.

- ①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 ②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 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③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④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문제 해설

갑과 을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① (X)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이 지배 집단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 ② (X)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를 사회 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사회화를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 ③ (O) 사회화가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입니다.
- ④ (X) 사회화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 미시적 관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13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 ②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 ③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 ④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문제 해설

‘갑’은 회사라는 집단의 실적에 개인의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을’은 개별 직원이 뛰어나도 조직 문화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 ① (O)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집단은 개인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집단은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습니다.
- ② (X)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은 을의 입장인 사회 실재론입니다.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에 기반을 둔 주장입니다.
- ③ (X)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 ④ (X)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계약설입니다. 사회 계약설에 기반을 둔 주장은 갑의 입장인 사회 명목론입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영화제에서 ㉠ 가족 희비극 ‘○○○’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 빈곤층에 속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웃기면서도 슬프게 다뤄 ㉢ 평론가 협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감독 갑은 시사회장에서 주연 및 조연 배우뿐 아니라 ㉣ 보조 출연자들 그리고 ㉤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 작품은 표준 근로 계약을 준수하며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방송 작가 ㉥ 노동조합은 이 소식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상 직후 갑에게는 다수의 ㉦ 대학 연극 영화학과 및 영화 동호회 등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보 기>

- ㄱ. ㉡은 ㉠과 달리 2차 집단이다.
- ㄴ. ㉢은 ㉣과 달리 사회 조직이다.
- ㄷ. ㉣, ㉤은 모두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 ㄹ. ㉥, ㉦은 모두 공식 조직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문제 해설

- ㄱ. (X) 가족(㉠)은 1차 집단입니다. 빈곤층(㉡)은 사회 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1) 2인 이상이 2)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3)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곤층은 2)와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빈곤층은 생활이 궁핍하다는 한 가지 특질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특질을 공유하는 무리를 사회학에서 ‘범주’라고 합니다.
 - ㄴ. (O) 사회 집단 중에서 1)구성원 간에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2)목표와 경계가 명확하며 3)엄격한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특성을 가진 것이 사회 조직입니다. 평론가 협회(㉢)는 사회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조 출연자들(㉣)은 소속감과 지속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 ㄷ. (X)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우연히 같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일 뿐이지 인위적으로 결성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 ㄹ. (O) 사회 조직과 공식 조직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식 조직은 사회 집단 중에서 구성원 간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고,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며, 엄격한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과 대학 연극 영화학과(㉦)는 둘 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III. 문화와 사회

07

다음 대화에 나타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나는 A국과 B국의 운전 문화를 조사했어. 그 과정에서 A국은 앞차가 가지 않으면 뒤차가 금세 경적을 울려 대지만, B국은 어느 정도 기다려 주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

을 : 나는 C국의 장례 문화를 조사했어. 조사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장례 방식이 C국의 자연환경, 종교, 민간 규범 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주목했어.

- ① 갑의 관점은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데 초점을 둔다.
- ② 갑의 관점은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 ③ 을의 관점은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한다.
- ④ 을의 관점은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막는 데 기여한다.

문제 해설

갑은 A국과 B국의 운전 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이해의 관점 중 '비교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을은 C국의 장례 문화를 자연환경, 종교와 같은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이해의 관점 중 '총체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 ① (X) 문화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비교론적 관점(갑)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려는 것은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지, 문화의 우열을 따지고자 함은 아닙니다.
- ② (X)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총체론적 관점(을)입니다.
- ③ (X) 비교론적 관점(갑)은 다른 문화들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한 사회의 문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④ (O) 총체론적 관점(을)은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려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소방직			
출제 영역	문화 이해의 관점 - 총체론적 관점 vs 비교론적 관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광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 우리나라에는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으로부터 소개된 후, 생맥주, 통기타 등과 어우러지면서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옷이 되었다.

○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는 종교도 있었다. ㉢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 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로 종교가 대체되기도 하였다.

<보 기>

ㄱ. ㉠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에 해당한다.
 ㄴ. ㉡은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ㄷ.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ㄹ. ㉣은 문화 변동의 결과 중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제 해설

- ㄱ. (X)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 ㄴ. (O) 외재적 변동이란 문화 변동의 원인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문화 전파를 의미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청바지를 소개한 것은 문화 전파 중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 ㄷ. (X) 간접 전파란 방송, 서적,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문화가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사람이 직접 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직접 전파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 ㄹ. (O) 문화 동화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전파된 문화 요소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양의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인해 기존의 토속 신앙이 사라진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크루아상(croissant)’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 빵이다.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 낸 오스트리아인들이 적국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 왕세자와 혼인한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오면서 이 빵이 프랑스에 널리 전해졌다.

(나) 베트남 음식인 ‘바인 미(bánh mì)’는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에 전래된 프랑스 빵 바게트에서 유래하였다. 처음 베트남인들은 바게트를 고급 음식으로 여겨 연유에 찍어 먹었다. 이것이 이후에 ‘바인 미’로 불리게 되었고,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화하였다.

- ① (가)에는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에는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에는 (나)와 달리 간접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에는 (가)와 달리 자극 전파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 (나)에는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문제 해설

- ① (X) 문화 동화는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자기 문화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크루아상이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프랑스 제빵 문화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동화의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② (O) 프랑스 빵 바게트에 베트남 고유음식으로 속을 채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됩니다.
- ③ (X) 간접 전파는 TV, 인쇄물, 인터넷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와 (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가)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의해 직접 전파가 이뤄진 사례이고, (나)도 식민지에 거주하던 프랑스인에 의해 직접 전파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 ④ (X) (가)에서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자극 전파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 문화 융합이랑 자극 전파 둘 다 되는거 아냐?’라고 생각하고 해설지를 찾아보시는 중일 것입니다. 자극 전파는 「직접 or 간접 전파→그 사회에 맞게 변형(발명)」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애초에 어떤 사회에 없던 문화가 전파가 되었고, 이것을 그 사회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 융합은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파를 받은 사회에서도 전파된 문화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화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걸 전파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이두로 고쳐 쓴 것은 자극 전파의 사례입니다. 바게트가 들어오기 전에 베트남에도 고유한 음식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섞여서 ‘바인 미’라는 제3의 음식이 만들어졌으니 문화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 ⑤ (X)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정복이나 식민 통치처럼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가)의 사례에는 그럴만한 개연성이 보이는 것이 없으니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헛갈리는 것은 (나)입니다. ‘바인 미’가 만들어진 것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배 하던 시기이니까요. 그런데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게트 먹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인들이 바게트를 고급음식으로 인식했다는 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과 양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 478페이지 - '185 사회 계층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핵심 이론 정리 185 사회 계층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공통점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의 결과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	개인의 능력, 직업별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직업의 귀천 인정) → 구성원 전체의 합의된 가치가 반영	권력이나 가정 배경 → 일부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
사회 불평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희소 가치는 차등적으로 분배 → 사회 계층화로 인한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현상	기득권의 강제에 따라 희소 가치는 차등적으로 분배 → 사회 계층화로 인한 불평등은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하므로 타파해야 할 현상
사회적 기능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장치 → 동기 부여, 인재 충원	한 사회의 인재 발굴 및 충원의 기회를 제한하여 사회적 박탈감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
계층의 변화	개인의 노력과 진화 과정을 거쳐 변함	혁명과 투쟁 과정을 통해 변함

15

다음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계
자녀의 계층	상	2	8	10	20
	중	6	14	40	60
	하	2	8	10	20
	계	10	30	60	100

- 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 ②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 ③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 ④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문제 해설

- ① (X) 자녀 세대는 중층의 비율(60%)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 ② (X) 부모 세대가 상층인 경우가 전체에서 10%입니다. 이 중 2%만이 계층 대물림을 했고, 나머지 8%는 중층(6%)과 하층(2%)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하였습니다.
- ③ (X) 주어진 자료는 세대 간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세대 내 이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④ (O) 부모가 중층인 경우는 전체에서 30%입니다. 이 중 8%가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했고, 또 8%가 하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하강 이동 비율은 같습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지방직
출제 영역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자료 분석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24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 2005년 : 상층 인구보다 중층 인구는 4배 많고,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 2010년 :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는 2배 증가했고, 하층 인구는 1/2로 감소하였다.
- 2015년 : 2005년에 비해 중층 인구는 1/2로 감소했고,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 ①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 ②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 ③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 ④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문제 해설

- 2005년에 상층 : 중층 : 하층의 비율은 1 : 4 : 5입니다. 이 비율을 인구 1,000만 명에 대입하면 상층 인구는 100만 명, 중층 인구는 400만 명, 하층 인구는 500만 명이 됩니다.
- 2010년에 상층 인구가 2005년 대비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층 인구는 200만 명이고, 하층 인구가 1/2로 감소했기 때문에 하층 인구는 25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에서 상층 인구 200만 명과 하층 인구 250만 명을 빼면 550만 명이 남기 때문에 중층 인구는 550만 명입니다.
- 2015년에 중층 인구가 2005년에 비해 1/2로 감소했기 때문에 2015년의 중층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하층 인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500만 명입니다. 중층 인구 200만 명과 하층 인구 5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300만 명이기에 상층 인구는 300만 명이 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상층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중층	400만 명	550만 명	200만 명
하층	500만 명	250만 명	5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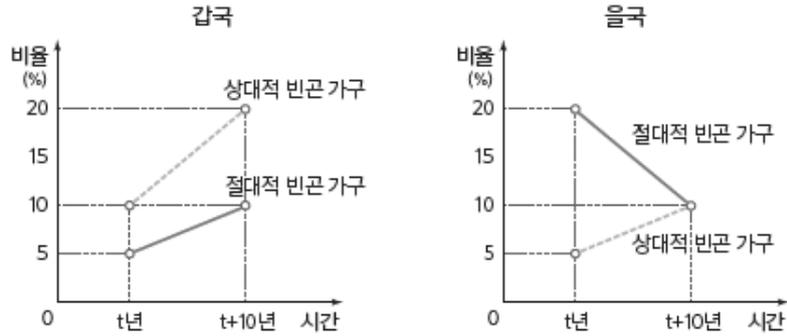
- ① (X) 2005년의 계층별 구성 비율은 '상층 < 중층 < 하층'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면, 2015년의 계층별 구성 비율은 '중층 < 상층<하층'으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 해당합니다.
- ② (X) 2005년의 하층 인구는 500만 명이고, 상층(100만 명)과 중층(400만 명)을 합한 인구도 500만 명으로 서로 같습니다.
- ③ (X) 2010년 상층 인구는 200만 명이고, 2015년 상층 인구는 300만 명으로 서로 다릅니다.
- ④ (O) 2010년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2005년은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구성 비율이 높아지는 피라미드형, 2015년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입니다. 따라서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입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사회 계층 구조(자료 분석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 그래프를 보고 <보기>에 있는 분석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 절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 상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들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 기>

- ㉠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 ㉡ 갑국에서 t+10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 ㉢ 을국에서 t년에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 ㉣ 을국에서 t+1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 해설

- ㉠. (O) t년에 갑국의 전체 가구 중 하위 5%는 절대적 빈곤에, 하위 10%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위 5%는 하위 10%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합니다.
- ㉡. (O) 중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는 것은 중위 소득의 50%가 최저 생계비보다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이 절대적 빈곤선(=최저 생계비)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갑국의 t+1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으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은 옳은 내용에 해당합니다.
- ㉢. (X) 을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습니다. 이 말은 최저 생계비(=절대적 빈곤선)가 중위 소득의 50%(=상대적 빈곤선)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오히려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 ㉣. (O) 을국에서 t+10년의 절대적 빈곤율은 10%입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가 전체의 10%이면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전체 소득에서 10% 미만이 됩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19년 해양경찰 3차
 출제 영역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는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보 기>

ㄱ.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ㄴ. ㉠의 수혜자는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ㄷ. 기초 연금 제도는 ㉡에 해당한다.
 ㄹ.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며, ㉣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제 해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는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할 경우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의 한 종류이므로 ㉠은 공공 부조이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사회 보험의 일종이므로 ㉡은 사회 보험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은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ㄱ. (X)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100% 정부 재정에서 마련하는 공공 부조(㉠)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 뿐입니다.
- ㄴ. (O) 한 개인이 공공 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은 공공 부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사회 서비스(㉣)를 통해 재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ㄷ. (X)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회 보험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이걸 헛갈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조이나 사회 보험이라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마련하면 공공 부조이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면 사회 보험입니다. 그런데 기초 연금 제도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공공 부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재개그처럼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데 출제자가 스스로 신박하다고 착각하면서 반복해서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ㄹ. (O)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입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국가직			
출제 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가)~(다)와 같은 복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기초 연금
- (나) 국민 연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① (가)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지원으로,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사후 처방적 성격이 있다.
- ② (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으며, 대상자의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 ③ (다)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가), (나)는 (다)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안에 직접적으로 대처한다.

문제 해설

-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 (다)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 ① (X) 공공 부조(가)가 사후 처방적 사회 보장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공 부조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전액 부담합니다.
 - ② (O) 사회 보험(나)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나)의 특징입니다.
 - ③ (O) 사회 서비스(다)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O) 수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 부조(가)와 사회 보험(나)과 달리, 사회 서비스(다)는 각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각자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금전적인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정답 ①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소방직			
출제 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V.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515페이지 - [핵심 이론 정리]에서 '순환론'에 대한 특징으로 아래 내용 추가

- 장기적 관점에서 문명의 순환을 설명 → 단기간에 나타나는 사회 변동 설명 곤란

0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갑: A는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을: B는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합니다.
 병: (가)
 정: B는 미래 사회의 변동 방향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 :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옳게 발표했네요.

<보 기>

ㄱ. A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쇠락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ㄴ. B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ㄷ.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의 유형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본다.
 ㄹ. (가)에는 'A는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해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사회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갑이 발표한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을이 발표한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사회 진화론'입니다. 정이 발표한 '미래 사회의 변동 방향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즉, 갑과 을이 설명하는 것은 '사회 진화론', 정이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서로 같은 입장을 설명해야 하고, 갑과 정, 그리고 을과 정은 서로 다른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을은 B를 설명함으로써 A를 설명하는 갑과는 서로 다른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B를 설명하는 정과는 서로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옳지 못한 발표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갑과 정의 발표는 옳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A는 사회 진화론, B는 순환론에 해당합니다.

- ㄱ. (X) 사회 진화론(A)은 사회 변동은 곧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의 쇠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순환론(B)입니다.
 ㄴ. (O) 순환론(B)은 모든 사회는 쇠퇴와 소멸의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운명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ㄷ. (X) 사회 진화론(A)은 모든 사회가 동일한 경로의 발전을 이룬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ㄹ. (O) 사회 진화론(A)은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미분화된 상태)에서 더욱 복잡한 것(분화된 상태)으로 진화해 가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정답 ④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진화론 vs 순환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15

다음은 A국가의 인구 부양비 및 고령화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표이다. 이를 분석하고 추론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자료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분 \ 연도	1970	2010	2050
총부양비(%)	84	37	89
유소년 부양비(%)	78	22	18
노년 부양비(%)	6	15	71
고령화 지수(%)	7	68	377

<보 기>

- ㉠ 2010년에는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지만 2050년에는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많다.
- ㉡ 2050년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970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 1970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10분의 1 미만이지만 2010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문제 해설

- ㉠ (X) 2010년 총부양비가 37%입니다. 이는 부양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피부양 인구가 37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010년에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2050년 총부양비가 89%입니다. 이는 부양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피부양 인구가 89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050년에도 여전히 피부양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적습니다.
- ㉡ (O)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을 나타낸 지표가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1970년 78%에서 2050년 1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O)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가 고령화 지수입니다. 1970년 고령화 지수는 7%입니다. 이는 유소년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노년 인구가 7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970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10분의 1미만이 맞습니다. 2010년 고령화 지수는 68%입니다.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노년 인구가 68명이라는 뜻입니다. 2/3라고 하면 66.666명을 의미하는데 68명이기 때문에 2/3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 ②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경찰1차			
출제 영역	인구 부양비(자료 분석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응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A~C를 '직업의 동질성 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A>B>C로 나타납니다. 다음 빈칸에 A~C를 각각 넣고,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준	비교 결과
1차 산업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사회 변동의 속도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사회의 다원화 정도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지식과 정보의 부가 가치 창출 정도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갑: A는 C에 비해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가 큼니다.
 을: C는 B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병: 기준이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일 때와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것은 3개입니다.
 정: 기준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일 때와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것은 2개입니다.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문제 해설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것은 농업 사회이고, 직업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정보 사회입니다. 따라서 A는 농업 사회, B는 산업 사회, C는 정보 사회에 해당합니다.

- 갑 (X) :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는 정보 사회(C)가 농업 사회(A)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 을 (O) : 정보 사회(C)는 산업 사회(B)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 병 (O) : 제시된 표의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비교 결과
1차 산업의 비중	A > B > C
사회 변동의 속도	C > B > A
사회의 다원화 정도	C > B > A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B > C > A
지식과 정보의 부가 가치 창출 정도	C > B > A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보 사회(C) > 산업 사회(B) > 농업 사회(A)의 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의 속도, 사회의 다원화 정도, 지식과 정보의 부가 가치 창출 정도 이렇게 셋이 '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와 비교 결과가 같습니다.

- 정 (X) : 기준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이면 A > B > C가 됩니다. 이와 일치하는 것은 1차 산업의 비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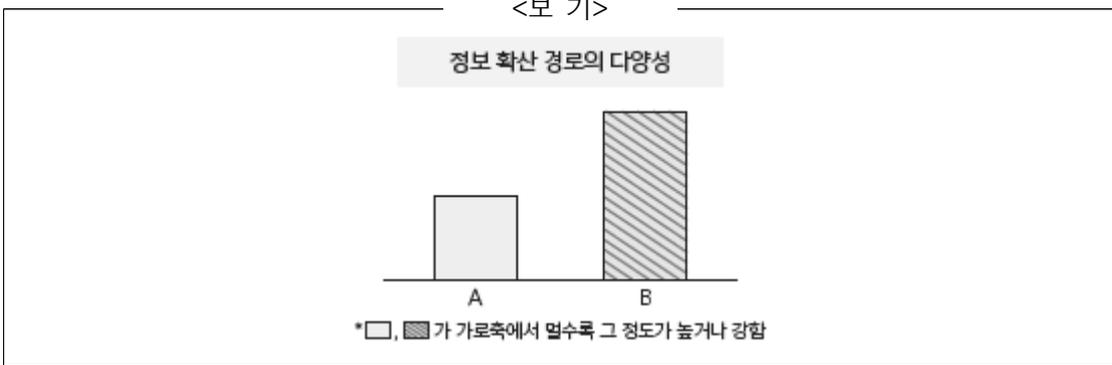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수능
 출제 영역 농업 사회 vs 산업 사회 vs 정보 사회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기>는 대중 매체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뉴 미디어와 인쇄 매체 중 하나이다.)



- ① A는 B에 비해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 ② A는 B에 비해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유리하다.
- ③ B는 A에 비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 ④ B는 A에 비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

문제 해설

뉴 미디어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쌍방향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합니다. 반면, 인쇄 매체는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뉴 미디어에 비하여 정보 확산 경로의 다양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A는 인쇄 매체, B는 뉴 미디어입니다.

- ① (X)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용이한 매체는 뉴 미디어(B)입니다.
- ② (X) 인쇄 매체(A)는 정보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일방향적 매체). 반면, 뉴 미디어(B)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양방향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매체입니다(쌍방향적 매체).
- ③ (O) 뉴 미디어(B)는 대중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매체는 뉴 미디어(B)입니다.
- ④ (X) 인쇄 매체(A)는 사람에 의해 물리적인 배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보 전달의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뉴 미디어(B)는 정보를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대량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문제 DATA				
출제 연원	2020년 서울시(보훈청 등)			
출제 영역	대중 매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